

文대통령 “남북 · 북미 회담, 살려야”

“남북 합의만으로 관계 못 풀어...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선행돼야... 韓 평화 물려주는 게 시대적 소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총무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경험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7·4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남북 합의의 성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경험과 성과들이 있었기에 추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남북관계는 지난 10여년간 파란 난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가 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만큼 고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총무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뿐 아니라 그 것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원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오늘날 남북 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갈 수가 없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설득력을 갖고 계신 원로 자문위원들께서도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2심도 “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 내라”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관사 설법식)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종익 전 KB한미은행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꼬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 불법 사찰 과정에서 강요를 받은 끝에 대표적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

김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6년 4월 상고심은 국가가 김씨와 가족에게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해 5월 김씨에게 지연이 자금을 더해 9억1200만원을 배상하고, 이 전 지원관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비서관 등이 속한 총리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김씨를 압박했다”며 불법 사찰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불법행위의 매개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 전 비서관 등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국가기관의 풀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정했다. /뉴시스

“성주 사드기지에 트레일러만 반입”... 타협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시설공사 자체 추가 반입을 놓고 12일 국방부와 경찰 반대시민단체가 대화를 통해 타협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34분께 농성하던 주민을 해산하기 시작한 지 3시간5분여 만이다.

국방부와 경찰, 반대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10여명은 지난해 11월21일 반입해 녹이 슨 굴착기, 롤러 등의 장비만 사드기지에서 반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중 트레일러 12대가 사드기지로 진입해 녹이 슨 굴착기, 롤러 등의 장비를 싣고 빠져나올 예정이다.

군 당국 관계자는 “주민이 다치는 상황을 우려해 이 같은 합의를 했다”고 했다.

박철주 평화회의 상황실장은 “오는 일요일(15일)까지 경찰이 (사드기지 인근에) 주둔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월요일부터 자제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 등 200여 명은 진밭교에 트럭 3대를 동원해 길목을 막아섰다. 이곳은 사드기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유일한 출입로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주민들은 진밭교 주변에 모여서 농성했다. 강제해산을 막기 위해 가로, 세로 각각 10m 크기의 대형 그물망에 머리를 넣은 채 집회를 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지붕에 덧대는 쇠파이프로 만든 별집 모양의 구조물을 몸에 들렀다. 일부 주민은 구조물에 고정된 슬레이트 연통에 팔을 넣고 청티이프를 감아 고정했다.

이 과정에서 목과 갈비뼈 등을 다친 3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뉴시스

절반 못맞추는 1300만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환경부 성능평가서 정확도 ‘천차만별’... 내년부터 성능인증제 도입 전망

시중에 판매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제품은 정확도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성능 평가실험을 진행했다.

간이측정기는 주로 건설현장, 배출사업장, 학교, 군부대 등에서 쓰인다.

무게가 50~100kg으로 별도 설치가 필요한 설치형은 가격이 400만~1800만원 정도, 3kg 안팎으로 공중전화부스 등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형은 80만~1300만원 수준이다.

광산란방식을 통해 16개 간이측정기의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 결과 설치형 측정기 12개는 80% 이상

3개, 70% 이상 5개, 50~60% 3개, 50% 미만 1개였다. 거치형 4개는 70% 이상 1개, 50~60% 사이 3개였다.

정확도 70%가 채 안 되는 제품이 절반에 가까운 7개에 달한 가운데, 1300만원 하는 설치형 측정기는 48.3%의 정확도를 보여 80만원짜리 거치형(64.1%)보다 정밀도가 떨어졌다.

두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이번 조사대상이 나를 정확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선정된 것이어서 실제 시판되는 측정기는 정확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실험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측정기지침(Air Sensor Guidebook)을 참고했다. 지침은 용도와 정확도에 따라 국가측정용(90%), 개인노출 확인(70%),

모니터링 보완(80%), 고농도 식별(70%), 정보제공·교육용(50%)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9일 환경법안소위를 열고 강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에 송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성능인증제 관련 조항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센서방식 간이측정기는 정확도가 50%를 밑돌아 성능인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중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민들은 이르면 내년 4월께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김태년 “수시·정시 통합, 사실 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과 관련해 “2022년 수시와 정시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것이냐 현행처럼 분리할 것이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 원 점수를 어떤 수준에서 반영할 것이냐를 다 종합하면 5개 이상 모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것은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교육회의로 넘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송안을 토대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